

2014년 주요기업의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인식과 보완과제

·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100개사) 중 응답기업 70개사를 중심으로 ·

2014. 11

목 차

< 요 약 >	5
I. 조사개요	7
1. 조사목적	7
2. 조사주관 및 조사대상	7
3.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7
4. 조사내용	7
II. 조사결과 : 주요기업의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인식과 보완과제 조사 분석	8
1.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인식	8
2. 동반성장지수의 보완과제 및 개선분야	9
3.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	12
III. 시사점 및 제언사항	13
1. 조사결과의 시사점	13
2. 제언사항	13
< 별 첨 > 「주요기업의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인식과 보완과제」 실태조사 결과(요약)	15
<참고문헌>	16

- 이 자료는 사업팀 한상우 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2-3771-0492 FAX : 02-3771-0143 E-mail : hsw@fkilsc.or.kr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4.8.4 ~ 2014.9.16(44일간)
- 조사대상 : 2013년 동반성장 지수평가 대상기업 108社 중 1차 협력사(8社) 제외한 100社 - (응답률) 70%(70社 응답)
- 조사방법 : 온라인, 이메일 조사(설문지 응답)
- 조사내용 :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인식, 동반성장지수 개선분야, 동반성장지수 보완과제, 동반성장지수 대안모델

2. 조사결과: 주요기업의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인식과 보완과제

(1)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인식

-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시행으로 동반성장 추진 틀이 마련되고,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확대에 공감하나, 참여 인센티브 미흡과 기업현실 및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도 상당수
 - 동반성장지수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로 ‘동반성장의 추진 틀 마련과 인식·문화 확산’(79.4%), ‘대기업 협력사 지원 확대 및 참여도 증가’(77.3%) ‘하도급 공정거래 제도정비 및 이행수준 향상’(67.2%) 順으로 응답
 - 반면, 부정적 효과는 ‘기업 이행부담은 큰 반면, 인센티브는 미흡하여 자발적 참여유인 저하’(88.7%), ‘기업현실과 규모별·업종별 특성 미반영으로 기업 창의성 발휘 제약’(85.7%),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노력에 대한 측정장치 부재’(78.6%) 順

(2) 동반성장지수의 보완과제 및 개선분야

-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10곳 중 9곳은 동반성장지수 평가방식을 업종별·기업규모별로 달리 적용하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등 현행 동반성장지수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
 - 평가대상 기업은 동반성장지수의 보완과제로 ‘업종별 규모별로 지수평가방식을 달리 적용’(47.1%) 하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상위평가기업만 발표’(40.0%) 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이 압도적

- 동반성장지수 개선분야로는 ‘평가등급 산정과 평가방식, 평가결과 발표방식’(48.7%)이 가장 높음
- 그밖에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및 평가배점’(17.1%), ‘중소기업 체감도 대상 선정 및 반영 비율’(15.7%),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11.4%),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이의신청 절차’(7.1%) 順

(3)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

-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로 응답기업의 절반가량이 ‘대기업의 경영자원과 특성,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수준 등 기업역량에 맞는 동반성장 모델 도입’을 꼽음
- 그 밖에 ‘대기업의 동반성장 평가와 병행하여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노력에 대한 측정 장치 마련’(18.6%),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세액공제 혜택부여 등 인센티브 강화’(14.3%), ‘성과분배형 CSR보다 협력가치 창출형 CSV방식의 모델 도입’(10.0%) 順으로 응답

(4) 시사점 및 제안사항

- (시사점) 지수 평가대상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시행으로 동반성장 인식·문화 확산과 대기업 협력사 지원 확대에 공감하나, 이행 부담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업종별·규모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
- 이에, 업종별, 규모별로 지수 평가방식을 달리 적용하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등 현행 동반성장지수를 보완·개선해야 하며, 기업역량에 맞는 대안 모델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 (제안사항)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동반성장의 기업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업현실과 역량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업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동반성장 평가와 발표방식을 보완해야 함
- 단기적으로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평가방식과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방식 모두 평가대상 기업이 만족할 수준으로 기업규모와 업종별 특성 반영이 이루어져야 함
- 장기적으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동반성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와 협력사의 역량에 따라 5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설계하고,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높여나가는 스텝-업(Step-Up) 방식의 CSV형 상생 협력 평가모델 도입이 필요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지난 3년간(2011~2013) 동반성장지수 시행으로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인식과 기업문화가 확산되고, 주요기업의 협력사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낸 반면, 현행 지수가 기업규모, 업종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자발성과 창의성 발휘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
- 이에, 본 센터는 2013년 지수평가기업을 대상으로 현행 지수에 대한 주요기업의 인식과 보완과제를 파악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보완과 대안모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조사주관 및 조사대상

- 조사주관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 조사대상 :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100社
-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108社) 중 1차 협력사(8社) 제외
- 응답률 : 70.0%(100社 중 70社 응답)

3.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E-mail/전화조사 병행)
- 조사기간 : 2014. 8. 4~9. 16(44일간)

4.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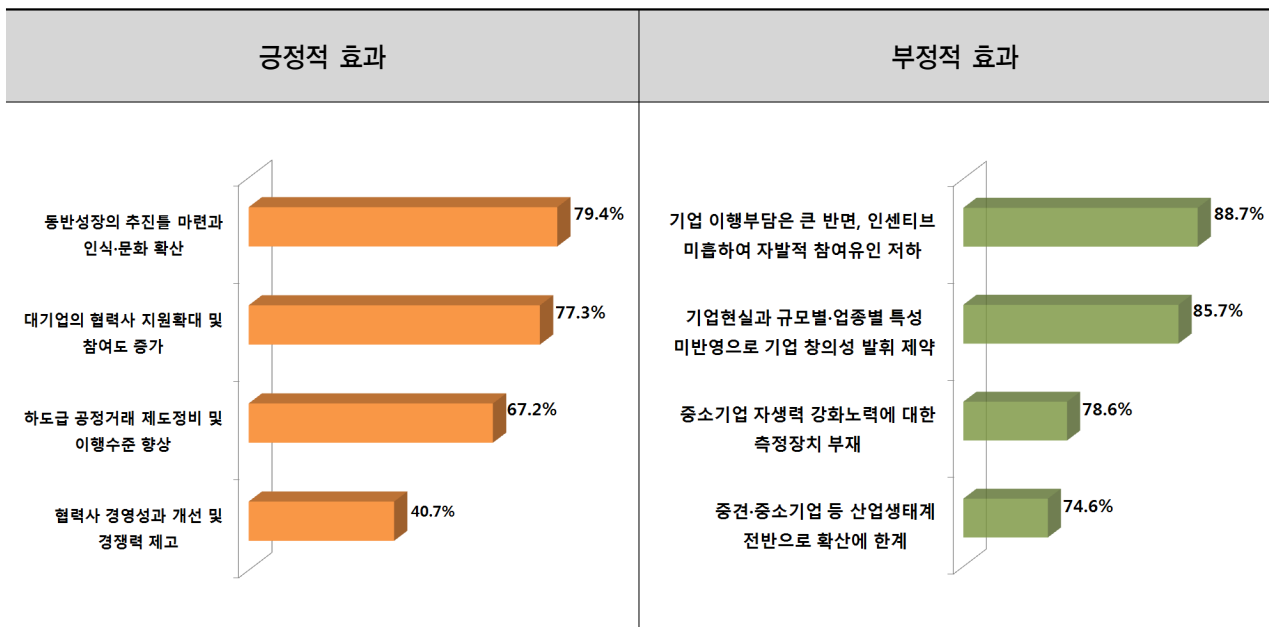
-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인식, 동반성장지수 개선분야, 동반성장지수 보완과제, 동반성장지수 대안모델

Ⅱ. 조사결과: 주요기업의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인식과 보완과제 조사 분석

1.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인식

-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시행으로 동반성장 추진 틀이 마련되고,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확대에 공감하나, 참여 인센티브 미흡과 기업현실 및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도 상당수
 - 동반성장지수 시행의 긍정적 효과로 ‘동반성장 추진 틀 마련과 인식·문화 확산’(79.4%),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확대 및 참여도 증가’(77.3%) ‘하도급 공정거래 제도정비 및 이행 수준 향상’(67.2%) 順으로 응답
 - 다만, ‘협력사 경영성과 개선과 경쟁력 제고’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음(40.7%)
 - 동반성장지수 시행의 부정적 효과로 ‘기업 이행부담은 큰 반면, 인센티브는 미흡하여 자발적 참여유인 저하’(88.7%), ‘기업현실과 규모별·업종별 특성 미반영으로 기업 창의성 발휘 제약’(85.7%),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노력에 대한 측정장치 부재’(78.6%), ‘중견·중소 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에 한계’(74.6%) 順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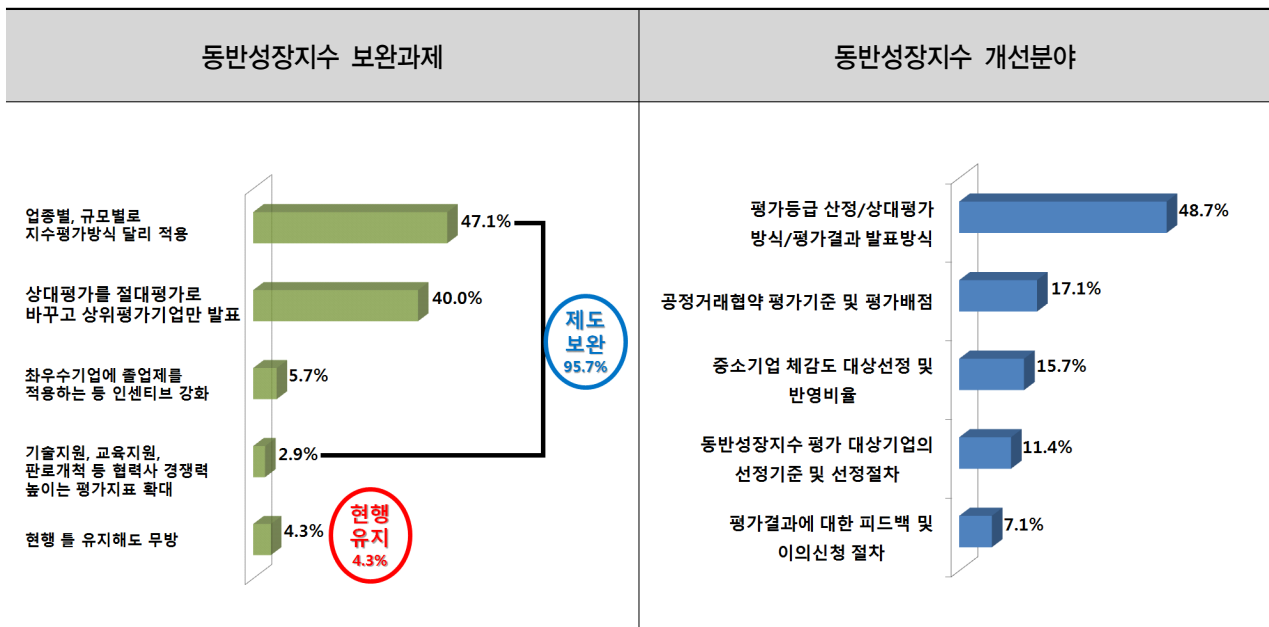
<동반성장지수 시행효과에 대한 주요기업의 평가>



2. 동반성장지수의 보완과제 및 개선분야

-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10곳 중 9곳(95.7%)은 동반성장지수 평가방식을 업종별·기업규모별로 달리 적용하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등 현행 동반성장지수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
 - 현행은 동반성장지수의 보완과제로 ‘업종별 규모별로 지수 평가방식 달리 적용’(47.1%) 하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상위평가기업만 발표’(40.0%) 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압도적(95.7%)
 - 반면, ‘현행 틀을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기업은 소수(4.3%)
- 동반성장지수 개선분야로는 ‘평가등급산정과 평가방식, 평가결과 발표방식’(48.7%)이 가장 높음
 - 그 밖에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및 평가배점’(17.1%), ‘중소기업 체감도 대상선정 및 반영비율’(15.7%),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11.4%),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이의신청 절차’(7.1%) 順

<동반성장지수의 보완과제 및 개선분야에 대한 기업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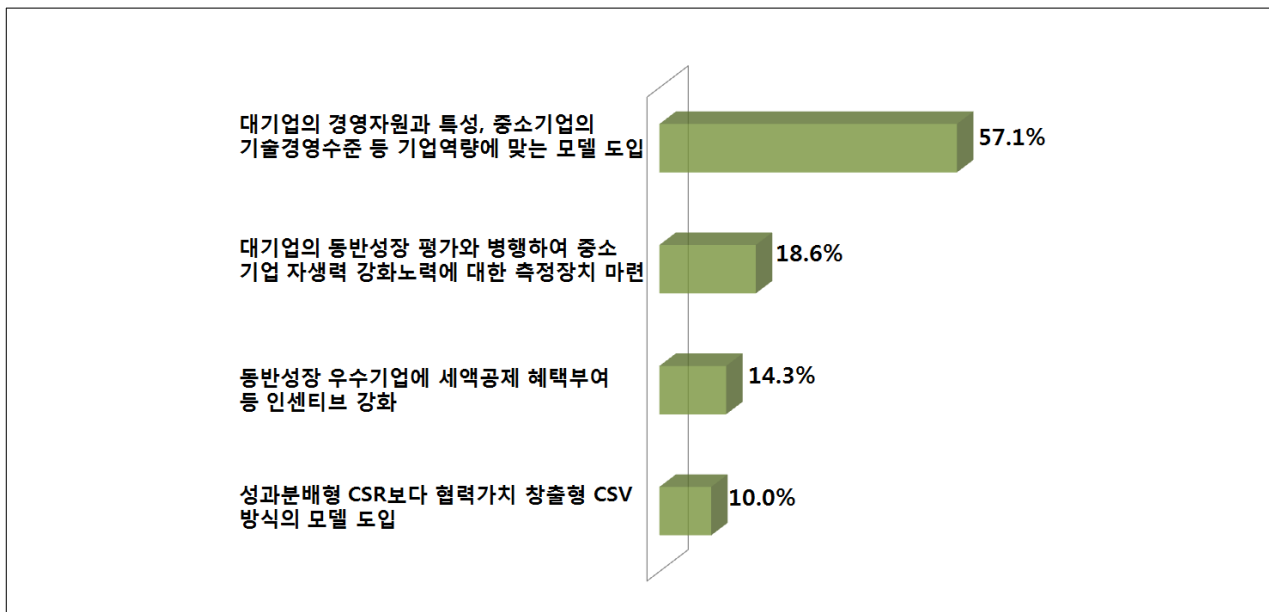
- 기업 특성상 임가공(재화의 단순가공) 업체와의 거래 관련기술 지원 및 보호 항목 평가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항목으로 대체 평가
 - (사례1) 대기업 A사는 임가공 관련기술을 협력업체에 100% 이전하고 있어 기술자료 임치제 및 특허출원 관련 해당 사항이 없음
-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심의방법이 기업현실에 맞도록 심사지침을 개정
 - (사례2) 조선업종 대기업 B社は기자재 대다수가 주문생산품으로 연간 20만 건의 주문이 발생되고, 신속한 주문이 요구되는데, 이에 맞춰 개별계약에 대한 사전심의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심의위원회가 매번 개최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개최하기 곤란
- 교육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부 교육기관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사내 교육에 대한 점수 인정
 - (사례3) 항공사 C사의 경우 항공기 제작사로부터 기술인증을 획득한 특수교육이며 이러한 특성상 사외 교육기관은 전무
- 협력사의 인력양성 부담 경감 효과는 동일함에도, '직무훈련 후 채용'이 아닌 '채용 후 직무훈련'이라는 이유로 실적을 불인정하는 것은 불합리
 - (사례4) 대기업 D사는 협력업체가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직무훈련을 D사가 대신 직무훈련을 진행 중(2013년 기준 30여 명 대상으로 2,000시간 실시)
- 1·2차 협력사간 지원방안 도입계획의 경우 대기업과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2차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의무를 1차 협력사를 대신하여 대기업이 맡게 되는 것인 만큼 1차 협력사에 대한 간섭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음
 - (사례5) 대기업 E사의 경우 1차 협력사 F사에 납품대금을 100% 현금지급하고, 2차 협력사에 동일한 지급을 요구했으나, F사는 부당한 경영간섭이라고 호소하며 이를 거부
- 체감도 조사 대상 50개사 및 조사표본 5배수(250개사) 제출규정은 협약체결 1차 협력사 수가 250개사 미만인 기업의 경우, 조사표본업체의 제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검증되지 않은 거래기업까지 제출해야 하는 모순 발생

- (사례6) 비제조업종 대기업은 협약체결 협력사가 55개사인 관계로 현행 규정인 조사표본 250개사를 제출할 수 없어 거래비중이 낮거나, 비하도급 관계로 협력관계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협력사들까지 조사표본으로 제출
- 반면, 제조업종 대기업은 체감도 조사표본 250개사의 수배에 달하는 협력사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 기업 중 계약기간, 매출액의존도 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체감도 조사표본으로 제출했고, 그 결과 체감도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됨
- 평가업종과 전혀 무관하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등 거래관계상 동반성장활동 추진이 어려운 일회성 단순비품(종이컵 등) 구매업체의 2차 협력사가 설문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음
- (사례7) 건설업종은 업종특성상 현장 주변 현지업체와의 일회성 거래가 불가피한데, 이러한 업체와 동반성장을 지속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중 무작위로 체감도 조사 대상업체로 선정될 경우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업종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설문내용과 응답방식은 체감도 평가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평가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업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문항 중 '해당 없음' 선택지가 추가되어야 함
- (사례8) 중견기업 I社は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필연적으로 납품업체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해외 판로 확대에 필요한 지원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공개된 체감도 점수를 보면, 동 분야 평가에서 지수평가 대상기업 중 최하위로 평가
- 통산·식품 업종은 실질적인 하도급 관계에 있는 2차 협력사가 없기 때문에 2차 협력사 체감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 (사례9) 통신업종은 2차 협력사가 없기 때문에 공정위 협약 평가 시 2차 협력사 관련 평가항목의 평가대상에서 이미 제외되었으므로 체감도 조사도 이를 반영해야 함
- (사례10) 식품업종의 경우 2차 협력사의 대부분이 농가, 어민 등으로 하도급 관계가 아니므로 2차 협력사 체감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3.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

-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로 응답기업의 절반가량이 ‘대기업의 경영자원과 특성,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수준 등 기업역량에 맞는 동반성장 모델 도입’을 꼽음
- 그 밖에 ‘대기업의 동반성장 평가와 병행하여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노력에 대한 측정장치 마련’(18.6%),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세액공제 혜택부여 등 인센티브 강화’(14.3%), ‘성과 분배형 CSR보다 협력가치 창출형 CSV방식의 모델 도입’(10.0%) 순으로 응답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에 대한 기업인식>



Ⅲ. 시사점 및 제언사항

1. 조사결과의 시사점

- 지수평가 대상기업은 동반성장지수 시행으로 동반성장 인식·문화 확산과 대기업 협력사 지원 확대에 공감하나, 동반성장 이행부담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업종별·규모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
 - (긍정적 효과) ‘동반성장 추진 틀 마련과 인식·문화 확산’(79.4%),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확대 및 참여도 증가’(77.3%) ‘하도급 공정거래 제도정비 및 이행수준 향상’(67.2%)
 - (부정적 효과) ‘기업 이행부담은 큰 반면, 인센티브 미흡으로 자발적 참여유인 저하’(88.7%), ‘기업현실과 규모별·업종별 특성 미반영으로 기업의 창의성 발휘 제약’(85.7%),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노력의 측정장치 부재’(78.6%)
- 이에, 업종별, 규모별로 지수평가방식을 달리 적용하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등 현행 동반성장지수를 보완·개선해야 하며, 기업역량에 맞는 대안모델 도입이 시급
 - (보완과제) ‘업종별 규모별로 지수평가방식 달리 적용’(47.1%),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상위평가기업만 발표’(40.0%)
 - (개선분야) ‘평가등급 산정과 평가방식, 평가결과 발표방식’(48.7%),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및 평가배점’(17.1%), ‘중소기업 체감도 대상선정 및 반영비율’(15.7%),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11.4%)
 - (대안모델) ‘대기업의 경영자원과 특성,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수준 등 기업역량에 맞는 동반성장 모델 도입’(57.1%), ‘대기업의 동반성장 평가와 병행하여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노력에 대한 측정 장치 마련’(18.6%),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세액공제 혜택부여 등 인센티브 강화’(14.3%)

2. 제언사항

- 단기적으로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평가방식과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방식 모두 기업현실과 업종별 특성을 더욱 반영해야 함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평가방식은 협력사 금융(자금)지원 평가기준, 기술(개발) 지원 및 보호 관련 평가방식, 납품단가의 조정실적 및 사급지원 평가기준, 모기업 평가에 1·2차 협력사 지원실적 평가배점 조정 등이 필요
-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방식의 경우 체감도 평가대상 선정기준 마련과 운영기준의 개선, 업종특성에 맞는 가감점 항목 및 체감도 설문방식 개선이 요구
-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동반성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와 협력사의 역량에 따라 5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설계하고,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높여나가는 스텝-업(Step-Up) 방식의 CSV형 상생협력 평가모델 도입이 필요함
- 협약평가항목의 구성과 이행 난이도를 기업역량과 현실여건에 맞게 1~5단계로 차등설계하고, 기업이 당초 선택한 레벨의 절대평가기준을 이수할 경우, 동반성장 이행수준을 점차 상위 레벨로 높여나가는 스텝-업 방식

「주요기업의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인식과 보완과제」 실태조사 결과(요약)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4.8.4 ~ 2014.9.16(44일간)
- 조사대상 :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108社 중 1차 협력사(8社) 제외한 100社 - (응답률) 70%(70社 응답)
- 조사방법 : 온라인, 이메일 조사(설문지 응답)
- 조사내용 :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인식, 동반성장지수 개선분야, 동반성장지수 보완과제, 동반성장지수 대안모델

1.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인식(긍정적 효과)

설 문 내 용	긍정적			보통 이다	부정적			합계 (%)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소계		조금 아니다	매우 아니다	소계	
동반성장의 추진 틀 마련과 인식·문화 확산	39.7	39.7	79.4	14.7	3.0	2.9	5.9	100.0
대기업 협력사 지원 확대 및 참여도 증가	31.8	45.5	77.3	16.7	6.0	0	6.0	100.0
하도급 공정거래 제도정비 및 이행수준 향상	32.8	34.4	67.2	25.0	7.8	0	7.8	100.0
협력사 경영성과 개선 및 경쟁력 제고	18.8	21.9	40.7	40.6	9.4	9.3	18.7	100.0

2.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인식(부정적 효과)

설 문 내 용	긍정적			보통 이다	부정적			합계 (%)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소계		조금 아니다	매우 아니다	소계	
기업 이행부담은 큰 반면, 인센티브는 미흡하여 자발적 참여유인 저하	50.0	38.7	88.7	6.5	3.2	1.6	4.8	100.0
기업현실과 규모별·업종별 특성 미반영으로 기업 창의성 발휘 제약	46.0	39.7	85.7	11.1	0.0	3.2	3.2	100.0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노력에 대한 측정 장치 부재	47.5	31.1	78.6	14.8	4.9	1.7	6.6	100.0
중견·중소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에 한계	33.3	41.3	74.6	19.0	4.8	1.6	6.4	100.0

3. 동반성장지수 개선분야

설 문 내 용	응답률(%)
평가등급 산정·상대평가방식·평가결과 발표방식	48.7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및 평가배점	17.1
중소기업 체감도 대상 선정 및 반영비율	15.7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11.4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이의신청 절차	7.1
합 계	100.0

4. 동반성장지수 보완과제

설 문 내 용	응답률(%)
업종별·규모별로 지수평가방식을 달리 적용	47.1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상위평가기업만 발표	40.0
최우수기업에 졸업제를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	5.7
기술지원·교육지원·판로개척 등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평가지표를 확대	2.9
현행 유지	4.3
합 계	100.0

5. 동반성장지수 대안모델

설 문 내 용	응답률(%)
대기업의 경영자원과 특성,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수준 등 기업역량에 맞는 동반성장 모델 도입	57.1
대기업의 동반성장 평가와 병행하여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노력에 대한 측정 장치 마련	18.6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세액공제 혜택부여 등 인센티브 강화	14.3
성과분배형 CSR보다 협력가치 창출형 CSV방식의 모델 도입	10.0
합 계	100.0

참고문헌

이종욱, 「한국형 동반성장의 넥스트 패러다임」,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3.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주요기업의 인식 및 보완과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3.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자율적 동반성장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계의 동반성장지수 보완의견」,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3.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기업현실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경제계의 동반성장지수 보완의견」,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4.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산업생태계의 강건성 제고를 위한 스텝업(Step-Up) 방식의 CSV형 상생협력 평가모델 정책제안」,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4.